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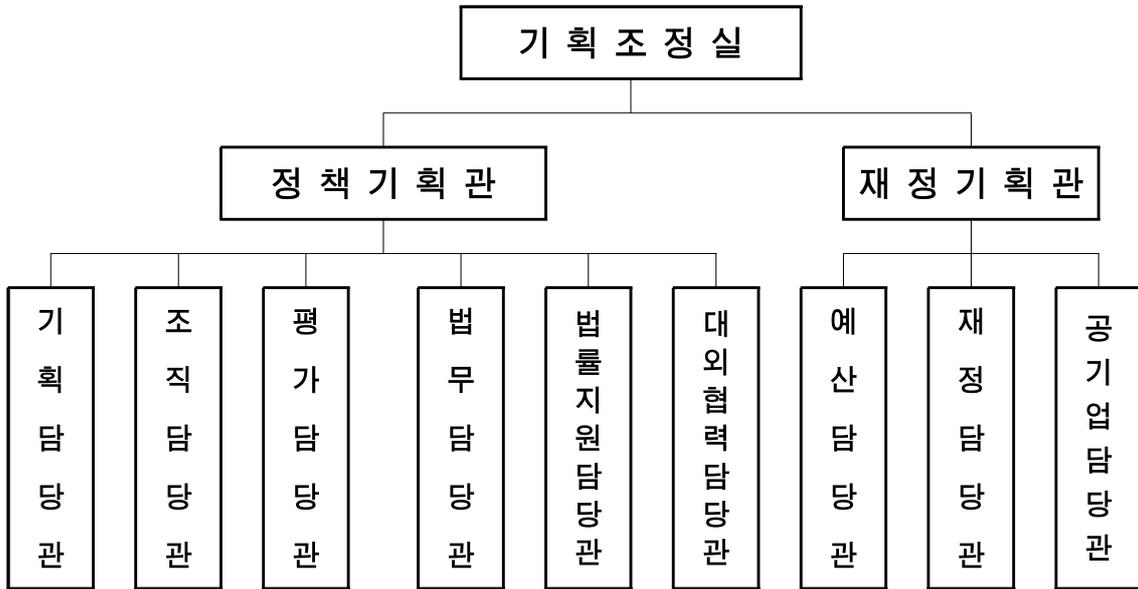
주요 현안 보고

2021. 9.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2관, 9담당관, 42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263/243명(정원/현원)

(’21. 8. 13.)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63 / 243 (143)	224 / 212	33 / 26	6 / 6
기 획 담 당 관	43 / 38 (16)	35 / 32	6 / 5	2 / 1
조 직 담 당 관	33 / 32 (24)	32 / 31		1 / 1
평 가 담 당 관	33 / 31 (16)	31 / 30	1 / 1	1 / 0
법 무 담 당 관	26 / 23 (15)	22 / 21	3 / 1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9 / 26 (19)	13 / 11	16 / 14	0 / 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7 / 15 (8)	14 / 14	3 / 1	
예 산 담 당 관	40 / 39 (20)	38 / 37	1 / 1	1 / 1
재 정 담 당 관	21 / 20 (14)	20 / 19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21 / 19 (11)	19 / 17	2 / 2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학술용역 심의 ○ 지방분권 업무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등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상생발전 추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자원 마련 등
재 정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산 총 규모 : 3조 4,535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감
합계	2,865,594 (61)	3,453,514 (47)	587,920
일반회계	973,223 (44)	1,560,514 (38)	587,291
특별회계	6,544 (-)	174,725 (-)	168,181
기금	1,885,827 (17)	1,718,275 (9)	-167,552

* 2020회계연도 결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용하는 순세계잉여금 미반영 등으로 규모차이 발생

○ 일반회계 : 총 1조 5,605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감
합계	973,223 (44)	1,560,514 (38)	587,291
기획담당관	1,090 (2)	1,047 (2)	-43
조직담당관	102,061 (12)	102,879 (11)	818
평가담당관	2,424 (5)	2,206 (4)	-218
법무담당관	723 (3)	1,050 (3)	327
법률지원담당관	6,099 (2)	7,596 (2)	1,497
대외협력담당관	3,976 (3)	1,721 (3)	-2,255
예산담당관	279,021 (3)	531,637 (3)	252,616
재정담당관	576,934 (10)	1,086,065 (6)	509,131
공기업담당관	895 (4)	1,038 (4)	143

○ 특별회계 : 총 1,747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감
예산담당관	6,544 (-)	174,725 (-)	168,181

○ 기금 : 총 1조 7,182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최종(사업수)	2021년(사업수)	증감
합계	1,885,827 (17)	1,718,275 (9)	-167,5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90,555 (-)	649,292 (-)	-441,26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788,314 (-)	1,063,367 (-)	275,053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6,958 (17)	5,616 (9)	-1,342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공정과 상생, 다시 뛰는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안정적인 시정
운영 기획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및
대외협력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

Ⅲ.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 인정적인 시정운영 기획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②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전략 마련
- ③ 시정 연구논문 공모를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①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②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대책
- ③ 무료 법률상담 확대를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3. 시정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및 대외협력

-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조직 강화
- ②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③ 서울-지역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
- ④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4.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

-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 ②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대응
- ③ 2022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추진
- ④ 투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기준 수립

1. 안정적인 시정운영 기획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②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전략 마련

③ 시정 연구논문 공모를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8.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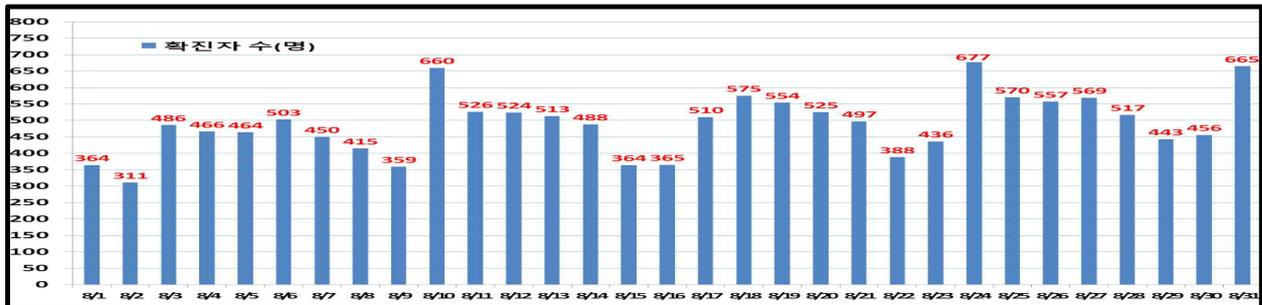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의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1. 코로나19 발생현황

○ (총괄현황) '20.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80,019명 확진, 사망 584명

구 분	'21.6월말			'21.7월말			'21.8월말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전 국	157,723명	2,021명 (1.28%)	16,924명	199,787명	2,098명 (1.05%)	42,064명	253,445명	2,292명 (0.90%)	53,658명
서울시	50,321명	514명 (1.02%)	6,257명	64,832명	535명 (0.83%)	14,511명	80,019명	584명 (0.73%)	15,187명

○ 최근 한달 간 일일 확진자 발생현황



○ 최근 4주간 확진자 현황 분석

구 분		32주 (8.1.-8.7.)	33주 (8.8.-8.14.)	34주 (8.15.-8.21.)	35주 (8.22.-8.28.)
주 평균 확진자수	전 국	1,596명	1,853명	1,777명	1,744명
	서울시(전국 대비)	435명(27.3%)	498명(26.9%)	484명(27.2%)	530명(30.4%)
65세 이상 확진자수(%)		265명 (8.7%)	224명 (6.4%)	283명 (8.3%)	273명 (7.4%)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1,008명 (33.1%)	1,222명 (35.1%)	1,273명 (37.6%)	1,462명 (39.4%)
사망자 수		7명 (0.2%)	12명 (0.3%)	17명 (0.5%)	10명 (0.3%)
무증상자 수		537명 (17.6%)	607명 (17.4%)	613명 (18.1%)	659명 (17.7%)

※ 거리두기 4단계 시행초기(7.11.~17.) 전국 대비 서울시 확진자 비중 36.6%

2.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점검 및 방역강화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9.5.까지)

구 분	3단계 대비 적용 내용
사적모임	4인까지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식당, 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8시~21시, 백신완료자 2인포함 4인까지 허용)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22시 이후 영업제한 →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 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 수용인원의 10%이내(99명 이내)
야외 음주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수도권 4단계 추가적용 사항

□ 다중이용시설 등 특별점검

- (유흥업소) **서울시·자치구·경찰 상시 합동점검**(7.1.~)
 - (대상업소) 총 4,386개소 : 단란주점 2,327개, 유흥주점 1,884개 등
 - (점검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44건 적발, 고발조치 (8.31. 기준)
 - (향후계획) 생활방역사 2,141명 활용 민관합동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학 원) **서울시·자치구·교육청 합동 특별점검**(8.9~8.22.)
 - (대상업소) 총 1,546개소 : 대형학원 262개소 및 중소형 학원 포함
 - (점검결과) 밀집도 완화 미흡, 명부관리 미흡 등 63건 적발, 즉시 시정조치 (8.22. 기준)
 - (향후계획) 3차 점검(8.23.~9.5.) 진행중으로 개학 후 방역관리 철저
- (종교시설) **매주 일요일 종교시설 현장 방역 점검 실시**
 - (대상시설) 총 9,110개소 : 개신교 7,919, 불교 824, 천주교 262 등
 - (점검결과) '21.1~ 8.29일까지 총 26,293회 점검, 개소당 평균 2.9회 점검
 - (향후계획) 종교단체, 협회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요청 및 위반시 대응 강화
- (한강공원) **서울시·경찰 심야 야외 상시점검**(7.9.~)
 - (점검결과) 마스크미착용 등 위반 23,998건 : 계도 23,804건, 과태료부과 194건
 - (시민안내) 언론사 동행취재 등 방역수칙 홍보, 심야 공원 내 음주금지 안내방송
 - (향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시까지 집중단속 및 특별점검 추진

□ 취약시설 특별방역 대책 추진

요양시설 돌파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 (시설현황) 총 1,163개소, 종사자 및 입소자 75,453명
 - 요양병원(124개소, 33,648명), 장기요양기관(1,039개소, 41,805명)
- (선제검사)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주 1회 선제검사 실시(8.11.~9.3.)
- (면회금지) 임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 전면금지(7.12.~)
- (백신접종) 신규 입원환자, 종사자 및 종전 미동의자 백신접종 독려

건설공사장 일용직 취약부분 선제적 방역조치

- (추진배경) 건설현장 집단발생 확산 및 외국인 근로자 확진 증가추세
- (선제검사 권고) 현장 내 모든 근로자 및 종사자 PCR 검사 권고
 - 대상시설 : 총 4,708개소, 95,535명(내국인 75,691명, 외국인 19,844)
- (현장점검) 총 4,414개소 방문하여, 검사독려 및 방역수칙 안내(8.2.~8.9.)

백화점·대형마트 내 집단감염 우려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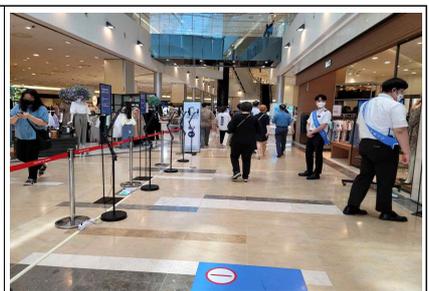
- (선제검사) 31개소 백화점 운영자 및 종사자 60,240명 검사(7.17.~8.21.)
- (전자명부) 백화점 및 대형유통시설 전자명부 도입 의무화(8.6.~)
- (현장점검) 출입자명부 도입·운영 및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 도입·운영 현황
 - 시설 내 식당·카페, 직원휴게실, 탈의실 등 방역취약시설 점검



백화점 출입명부 작성(더현대 서울)



대형마트 출입명부 작성(홈플러스 금천점)



복합쇼핑몰 출입명부 작성(코엑스몰)

2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접종 추진

□ 서울시민 백신접종 추진현황

- 전체 960만명 중, 1차 56.6%, 2차 30.9% 백신 접종(8.31. 기준)
- 최근 1주간 접종 1,000,516명, 일평균 142,931명 접종

서울시 인구		접종자 누계	8.31.	8.30.	8.29.	8.28.	8.27.	8.26.	8.25. 이전
9,575,355	1차	5,415,837	51,342	83,424	2,697	51,398	110,086	126,823	4,990,067
	2차	2,959,659	95,981	107,394	2,921	50,134	101,098	71,032	2,531,099

□ 백신 자율접종 추진

- (추진배경) 치명률 높은 고령층 중심 정부 백신 접종계획과 함께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선정 접종
- (추진현황)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 대상자 중 41만명 64.6% 접종

구 분	고위험군	대상자 수	접종자 (8.31. 1차 접종 기준)
합 계	-	641,944명	414,751명(64.6%)
1회차,2회차	대중교통 종사자, 이동 노동자, 학원 종사자 등	282,583명	253,043명(89.5%)
3회차	식당 카페 종사자 등	359,361명	161,708명(45.0%)

- (향후계획) 접종 대상자 안내 강화 및 누락자 접종방안 검토

□ 백신 관리 상황 점검 및 폐기 최소화

- (백신관리 점검) 총 288명 8개 조 점검반 구성, 위탁의료기관 등 점검
- 점검개요 : 3.5.~8.10. 총 804개소 점검
- (주요적발 사례) 온도일탈에 따른 폐기, 개봉중 파손 사례 확인 등
- (향후계획) 소형의원 집중점검(8.18.~8.20.) 및 주요 사례 주의사항 전파
- 점검대상 : 위탁의료기관 중 10vial 이상 보유 의원 150개소(자치구별 6개소)

③ 코로나19 장기 대응역량 강화

□ 코로나19 치료역량 강화

- (추진배경) 7월초 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급증 한 후 정체 중
- (병상확보) 8월말까지 일 확진자 600명 치료 가능한 역량 확보 목표

구 분	'21.6월말	7월 추가확보	8월~9월초 추가확보	'21.9월중
중환자병상	305병상	-	112병상(행정명령)	417병상
감염병전담병상	1,843병상	52병상(자체확보)	284병상(자체확보113, 행정명령171)	2,179병상
생활치료센터병상	2,655병상	2,519병상(자체확보)	705병상(자체확보)	5,879병상

- (병상현황) 중환자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는 안정적이나, 감염병전담병상은 추가 확보 필요함(8.31. 기준)

구 분	보유	사용	잔여	가동률
중환자병상	392병상	214병상	178병상	54.6%
감염병전담병상	2,055병상	1,656병상	399병상	80.6%
생활치료센터병상	5,198병상	2,947병상	2,251병상	56.7%

- (향후계획) 상급병원 중환자병상 확대 행정명령(1%→1.5%),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하지 않은 종합병원 감염병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5%) 이행 컨설팅 등 지원

□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배경)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새로운 방역체계 논의 및 서울시 방역 정책 평가를 위해 감염내과 전문가, 언론인, 의료인 등 자문단 구성

- (논의안건) 현 대응상황 평가 및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모색

-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자문
- ▶ 향후 장기적 관련 방역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안 및 자문 등

- (운영실적) 총 4회 개최(1차 8.12. 2차 8.16. 3차 8.19. 4차 8.31.)

4 정부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체계 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주 4회(화,수,금,일) 서울시 방역상황 및 조치계획 보고 철저
- (주요 협력사례) 중대본 및 정부부처와 협력 대응
 - 역학조사 강화 : 7.12일 수도권대책회의 논의에 따라 자치구 총 300명 직원 파견 및 의료인력 100명 채용 지원, 수방사, 서울경찰청 인력 지원
 - 유학생 관리 : 7.28일 중대본에서 교육부 요청에 따라 5개시설 1000명 규모 임시격리시설 확보, 입국데스크 마련, 대학과 협조 자가격리 1일2회 모니터링 중
 - 8·15 집회 관리 : 8.6일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 요청에 따라 815 집회 대책 수립, 집회 취소 당부 언론브리핑, 3일 연휴기간 연인원 447명 집회 관리인력 배치
- (市 건의 주요 반영사례) 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
 - 검사소 확대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 주요 결절점에 정부운영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요청 → 국토부 반영, 4개소 시범 운영 중
 - 연휴 이동자제 권고 : 8.14~16일 연휴기간 중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이동자제 캠페인 건의 → 행안부 주재 범부처 캠페인 추진
 - 병상확보 : 대규모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 병상확보 비율 상향 요청 → 상급종합병원 병상확보 비율(1%→1.5%) 상향, 중증환자 치료 84병상 추가 확보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구청장회의(화), 부구청장회의(목) 매주 번갈아 개최 방역 현안 논의
- (주요논의 안건) 폭염 방역관리, 건설현장 방역강화, 현장 단속 실효성 강화
- (실무협의) 보건소장 중심으로 애로사항 수렴하여 소관부서별 대책마련
- (향후계획) 방역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격주 1회로 조정하되, 방역사항 협조를 위해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유지

2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전략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전망하고, 시정 전 분야에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인구구조 변화가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연구
- 체계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변화 대응전략 마련 및 핵심 정책과제 발굴

□ 추진내용

- 종합적 대응 전략 검토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실무지원 조직 구성
 - 기초실, 연구조직(서울연구원), 민간전문가 간 유기적 운영·시너지 창출
 - 분절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균형·미비점 보완, 성과 증대
 - ※ 인구변화대응팀 신설('21.7.)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정 분야별 영향 예측 및 대응 방향 도출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대한 분야별 예측과 분석
 - 市, 서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대응전략 논의체계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 최소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치법규) 체계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 추진
 - (논의기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심의 등을 위한 인구위원회 구성
-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마련 및 정책과제 발굴
 -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저출생·고령화' 라는 구조적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 대응 및 시정 쏠 분야에 걸친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 (전략이행 성과관리 기반마련) 분야별 전략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계획 수립 : '21. 8~12월
-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추진 : '21. 8~12월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고려한 정책과제 발굴 : 수시

3 시정 연구논문 공모를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사업을 통해 현장성 있는 정책개발과 직원들의 자발적 연구를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21년도 예산 : 15백만원)
- 공모분야 : 서울시정 전 분야 연구 논문 ※ 연 1회
 - 복지·일자리·안전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발, 법령 제도 개선분야
 - 시정 분야별 시민 소통·참여 증진 및 정책 만족도 향상 방안 등
- 응모자격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직원
- 공모시상 : 총 17편 논문 시상 (최우수1, 우수4, 장려12)
 - 서울시장 상장 수여 및 응모자 전원 교육시간(개인 25시간, 공동 15시간) 인정

□ 추진내용

- (공모) '21년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결과 총 22건 접수('21.3.8.~7.30)
- (심사) 우수작 선정·활용을 위한 시정연구논문 심사 추진
 - (1차 : 서면심사) 논문 1편당 해당분야 전문가 2명 교차심사 실시
 - ▶ '표절검사시스템 및 부서의견조회'를 통해 표절여부,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 검토 병행
 - (2차 : 구술 최종심사)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논문 심사위원회 (10명 내외) 질의답변 등을 통해 1차·2차 심사결과 종합하여 순위결정
 - ※ '18년 17편 선정(31건 접수), '19년 17편 선정(17건 접수), '20년 17편 선정(33건 접수)
- (활용) 시정연구논문총 '서울터전' 발간(100부) 및 서울도서관 e-book 게재

□ 향후일정

- 시정연구논문 심사 및 시상 : '21. 9~11월
- 시정연구논문총 '서울터전' 발간 : '21. 12월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의 구제 강화

②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대책

③ 무료 법률상담 확대를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1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위원정원 : 50명 이내[현원 42명(내부위원 5, 외부위원 37)]
- 구 성 : 매회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개최 : 매월 2회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및 자치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 소요예산 : 총 276백만원(사업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운영실적(8.12.기준)

개최횟수	재결결과			
	총 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15회	615건 (100%)	92건 (14.9%)	378건 (61.5%)	145건 (23.6%)

□ 추진내용

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21. 6. 3. 시행)을 통해 위원회 회의 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최대 6명 → 8명) 근거 마련
 -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위원회 회의 참여 확대로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 구술심리 및 주·부심 제도 운영을 통한 심도 있는 안건 심사
 - 구술심리 :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주·부심제도 :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법률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를 주·부심으로 지정·심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8.12.기준)
구술심리비율	3.9%	3.9%	5.5%
주(부)심 지정건수	525건	659건	345건

2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사건 **재결기간 단축**
 - 사건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장기 미결사건 집중 관리를 통한 안건 신속 상정
 - 평균 재결기간 : 110일('19) → 104일('20) → **74일**(30일 단축, '21.8.12.)
- 특히, 생계형 사건의 **신속한 처리(58일)로 경제활동 손실을 최소화**
 - ※ 생계형 사건 :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택시운수과징금 등 민생과 관련된 사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8.12.기준)
평균 재결기간	110일	104일	74일
생계형 사건	85일	84일	58일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를 위한 **재결레집 제작 및 배포** : '21. 10월
 - 행정심판 주요 사례 자치구 전파를 통한 담당자의 업무 처리 적정성 도모
 -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300부) 예정
- 행정심판 제도 안내 리플릿 추가 배포 : '21. 9월
 - 심판청구 방법, 국선대리인 제도 등 안내를 통해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주요 배포처 : 25개 구청 민원실 및 425개 동주민센터 등
 - 리플릿 1차 배포(1만부) 및 시홈페이지 배너 완료('21. 4월)

2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 권익보호 대책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기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기초 고용질서 확립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 민간위탁 사업장 내 안전 강화 조치를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추진내용

- (근로조건 보호) 노동자 안정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재위탁·재계약 안건에 대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부)」 이행여부 심의
 - [위·수탁 협약] 협약서에 수탁기관 변경시 기존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 승계 의무 및 근로조건 관련 중대한 사항 위반시 협약해지 명시
 - [종합 성과평가] 근로여건 등 노동자 처우개선 평가지표 강화(5 → 7점)
- (임금체불방지)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市 예산회계인사노무매뉴얼 마련, 표준협약서에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명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 의무화, 사업부서 지도점검(연1회), 회계감사 (연1회 /조직담당관)
- (인권보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협약서에 인권보호 항목 포함
 - 인권 침해시 市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
 - 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 (교육실시) 수탁기관장, 종사자 교육 의무화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성희롱예방·인권·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의무(연1회)

□ 추진계획

- (근로조건 보호) **비위행위 발생 시 제재 강화 및 사전방지 제도 마련**
 - [비위행위 근절] 주요 비위행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협약 해지 및 종합성과평가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 향후 사업 참여 배제
- (임금체불방지 제도 강화)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도입**
 - ‘노무비 전용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내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 지급 지연 발생 예방
- (인권보호 강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평가 강화**
 - [성평등] 수탁기관 취업규칙에 성평등 노동관계법 사항 반영토록 안내, 반영 여부는 지도·점검 항목에 포함
 - [노동환경 컨설팅]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항목에 반영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발생 기관’으로 판단한 경우 감점 처리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관련 사전 이행준비 철저**
 - 법 시행 대비 조치 필요사항 사전 안내(조직담당관 → 사업부서, ’21.8월)
 - ▶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반영 조치 및 수탁기관에 법 시행 사항 관련 안내 실시
 - 市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민간위탁 분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11월중)
 - 산업재해·시민재해 분야별 안전 전문 인력을 市에 배치하여 전담 컨설팅 지원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 : ’21.10월
 - * 민간위탁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부서·수탁기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21.11월
-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자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시행 : ’22.1월~

3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시민들이 일상에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때 쉽고 편리하게 안정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권의 보호

□ 추진방향

- 상시 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만족도 제고
- 마을변호사·법무사 등 담당자 격려를 통해 사업수행 의욕 고취

□ 추진내용

-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변호사단 인력 확보**
 - 임기만료자 재위촉('21.3월, 132명) 및 신규 위촉('21.5월, 202명)
 - 마을변호사, 사이버 법률상담 등 대시민 무료 법률상담 활동 중
 - ※ 코로나19 확산에도 유연한 상담방식 운영으로 안정적 법률서비스 제공(전화상담 등)
-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확대를 통한 법률 상담의 적시성 제고**
 - 월 2회 이상 상담 주민센터('20.12월 178개 → '21.8월 284개) 확대
 - 향후 월 2회 이상 상담 주민센터를 전체 425개동의 80%(340개)까지 확대 추진
- 마을변호사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등 조사 실시**
 - 마을변호사 인지 경로, 이용 과정의 만족도 등 설문 조사 실시
 - 성별, 연령, 권역 등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 '21년 8월 현재 만족도 조사 실시 중
-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 신규 배치**
 - 법무사 192명 신규위촉, 23개 자치구 153개 동주민센터 배치('21.6월)
 - 생활 속 법률상담(부동산 등기, 임대차 등)

□ 향후계획

- 법률상담 예약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21.9월)
 - 마을변호사·법무사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 마을변호사·법무사 등 유공 표창 자긍심 및 참여의욕 고취('21.12월)

3. 시정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및 대외협력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조직 강화

②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③ 서울 - 지역 상생발전 교류협력 추진

④ 코로나19에 따른 서울 - 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조직 강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1.26. 제정, 2022.1.27. 시행)에 따른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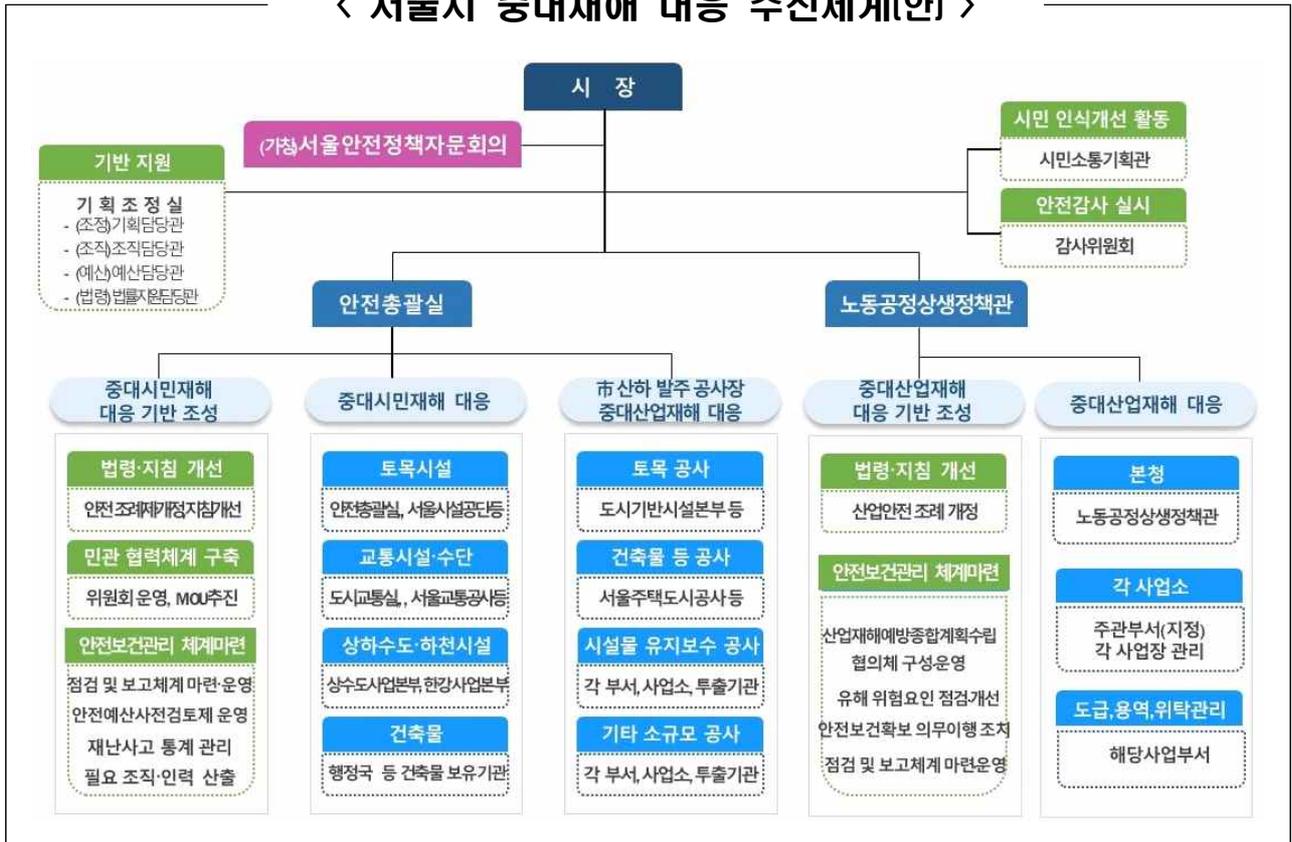
□ 추진배경

-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21.1.26. 공포, '22.1.27. 시행) 으로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 중대재해 시 처벌**

□ 추진방향

- 중대재해 총괄부서(본청)와 단위사업별 추진부서(사업소 등)의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기반 조성**
 - 총괄부서 : 안전총괄실(중대시민재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중대산업재해)
 - 참여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안) 〉



□ 추진계획

단 기

○ 안전총괄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조직·인력보강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조직·인력보강(안)

- 안전총괄실 : 법률전문가, 시설물 및 공사장 관리, 행정·시스템 담당인력 등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노동안전조사요원 등

- 주요업무 : 법령·제도 개선 및 업무매뉴얼 마련,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안전관리 현황 정기조사·보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등

○ 단위사업 추진부서의 **실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 시설물 관리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적정 안전보건 전문인력* 보강**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담인력 배치(300명 미만은 위탁 가능)

- 시 산하 발주공사장 관리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공사장 안점점검 횟수 확대 등 현장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실무조직·인력 보강**

중 · 장기

○ 본청 내 **중대재해 총괄부서 통합·일원화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21.10. 고용노동부 확정 예정), 市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용역결과('21.10. 완료 예정), 중대재해예방관련 책임·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괄부서 일원화 및 별도 전담조직 신설 검토**

□ 향후일정

○ 소요인력 및 업무량 분석·검토 : '21. 9월~

○ 조직·인력보강 : '22. 1월~

부서	담당업무
<p>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구성 추진 ▶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 시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안전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 시설별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 마련 및 정기 현황 조사 ▶ 서울시 전직원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의무 교육화 ▶ 시 산하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p>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준수 가이드라인(업무매뉴얼 등) 제작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민간사업장 배포 ▶ 시 산하 발주공사장 중대산업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대응 및 산업안전법령 상 의무조치 등 협조
<p>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p>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등
<p>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사항 점검회의 추진
<p>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련 조직·인력보강 및 신설 검토
<p>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협조
<p>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률 검토 지원
<p>시설물 관리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대책 수립·이행 ▶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p>시 산하 발주공사장 관리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현장 안전점검 추진 등

2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통합 소송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및 체계적 송무 지원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업무 수행 체계 확립

□ 추진방향

- **市 소송업무 통합으로 체계적·전문적인 소송수행**
- **부서 직접수행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관(변호사)의 효율적인 송무지원**
※ 소송 직접수행 부서: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 세제과, 38세금징수과, 도로계획과
-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민사소송, 중요소송으로 지정관리**

□ 추진실적

○ 소송수행 현황

- 市 진행소송 (807건(법률지원담당관 620건, 부서 직접수행 187건))('21.7월말 기준)

구 분	수 행 건 수			관 결 확 정					진 행
	소 계	이 월	신 소	소 계	승 소	패 소	기 타	승소율	
2021.7월	1,024건	699건	325건	217건	155건	50건	12건	75.6%	807건
2020	1,115건	559건	556건	416건	278건	100건	38건	73.5%	699건
2019	1,082건	610건	472건	523건	379건	110건	34건	77.5%	559건

○ 중요소송 지정 현황

- 소송심의회에서 사안의 복잡성, 소가액, 시정영향도를 고려하여 지정('09년부터)

합 계	'09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7건	35건	2건	13건	6건	9건	2건

□ 향후계획

○ 법률지원담당관 수행 사건

- 법률전문관 및 지원부서 유기적 협력 강화(소송의 다양화 및 전문화 대비)

○ 부서 직접수행 사건

- 서면검토, 법률고문 지원, 소송결과 공유 등 송무지원 강화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서울과 지역간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코로나 19가 가져온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
- **재난재해** 발생 지역 긴급 복구 지원을 통한 **지자체간 협력 강화**

□ 추진내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2021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사람·물자·정보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 36개 사업 추진중
 -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상생 사업 지속
- **서울혁신정책 노하우를 지역과 공유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방식 개편**
 -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연수 추진이 어려워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운영
 - ▶(서울(지역→서울) 혁신로드) 온라인 서울정책연수 영상 제작(22개)·활용(유튜브 등)
 - ▶(찾아가는(서울→지역) 혁신로드) 영상회의로 정책컨설팅 추진(완도, 당진, 홍천, 삼척)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우호교류협약(MOU) 추진**
 - 신규 MOU 수요를 반영하여 광역 등 지자체와 MOU 체결
 - 온라인 판매(라이브 커머스 등), 청년일자리 해결 등 지역 간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재해구호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
 -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전남, 경남 지역의 피해 복구 긴급지원(4억)
 - 피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서울과 타지자체 간 상호 우호협력 강화

□ 향후계획

- 서울정책연수관련 영상 추가 제작(6편) : '21. 9월~10월
- 서울-지자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전남, 양구) : '21. 10월~11월
- 2021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개최 : '21. 11월

4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지역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서울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수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역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중요 과목중심의 비대면 수업 진행
- 市-지자체-민간(KT)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절감

□ 추진내용

- 서울 소재 대학생-지방 중학생 방과 후 비대면 학습 멘토링 실시
 - 사업기간 : '21년 7월 말~11월 말(4개월)
 - 참여자 선발 : 서울 대학생 162명(11개대학), 지역 중학생 425명(광역(6) 136명, 기초(23) 289명)
 - 멘토링 운영 : 멘토(대학생)-멘티(중학생) 162그룹(1:2~3명), 7.27일부터 실시
- 국·영·수 등 주요과목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월 16시간 수업(주 2회, 2시간씩)

서울시
추진계획수립, 대학생 선발, 대학생 활동비 지원

지자체
중학생 선발·관리

KT
온라인 플랫폼(자체개발) 및 교재비 지원, 사업운영

※ 관련사진



- 소요예산 : 311백만원(대외협력기금)

□ 향후계획

- 멘토링 학습 추진 현황 모니터링 : 상시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KT 업무협약 : '21. 9월
- 멘토링 실적 우수학생 선발 및 포상 : '21. 12월

4.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②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대응

③ 2022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추진

④ 투자 출연출자기관 예산 편성기준 수립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년 회계연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집행 추진
-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한 이월 불용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목표 및 실적

- 하반기 목표 : 예산현액의 88%* 집행 (70조 9,041억원)

* (행안부 설정 목표) 본청 92.7%, 기초 76.6%, 공기업 92.0%

- 집행 실적('21.8.11. 기준) : 53.5% (43조 1,19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목 표 액	집행실적
계	80조 6,382	70조 9,041 (88.0%)	43조 1,198 (53.5%)
본 청	45조 2,489	41조 9,457 (92.7%)	23조 9,928 (53.0%)
자치구	23조 3,747	17조 9,050 (76.6%)	12조 5,371 (53.6%)
공기업	12조 146	11조 534 (92.0%)	6조 5,899 (54.9%)

□ 추진계획

- 집행관리 강화 및 주요사업 중점관리

- 집행 부진사업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한 집행 지연사유 파악 및 집행 제고 방안 강구
-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집행률이 미흡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현황 주기적 점검

- 자치구 신속 재정지원 및 신속집행 독려

- 자치구의 확장적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교부금·보조금예산 신속 교부
※ '21.8.11.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67%(6조 6,755억원), 조정교부금 60%(2조 4,542억원) 교부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개 및 신속집행 적극 참여 독려

□ 향후일정

-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 월 1회

2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대응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을 위해서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하여 실질적인 市 재정확충 도모

□ 추진경위

- '18.10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발표**(1단계·2단계 구분 추진)

1단계('19~'20)	▶ 지방소비세율 확대(11% → 21%) ▶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3.5조원 내외)	▶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 ▶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 → 45%)
2단계('21~'22)	▶ 지방재정제도 근본적 개편 ▶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	▶ 지방세 추가 확충 ▶ 지방교육재정 개혁

- '21.07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확정안 발표**

□ 주요내용(2단계 재정분권, 전국)

지방재정 확충 (A=B+C+D)	지방소비세 확충 (B)	지역소멸대응기금 (C)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D)
5.3(조원)	4.1	1	0.2

- 소비세율 4.3%p 인상 : 이양사업(2.25조원) + 교부세(0.8조원) + 지자체 배분(1조원)
-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 매년 1조원(10년 한시운영) · 낙후지역 집중 배분
- 기초연금 등 대응 지방비 부담 완화 : 국고 보조율 인상·사업추가발굴 등

〈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市 재정 확충액 〉

- ▶ (1단계)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약 **5,144억원**(자치구교부금 등 제외시 3,667억원)
- ▶ (2단계)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약 **772억원**(자치구교부금 등 제외시 521억원)

□ 추진계획

- 실질적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위해 국세-지방세입 구조개선 지속 건의
 - 국세:지방세 비율 78:22('18) → 72.6:27.4(2단계) → 60:40로 개선 지속 건의
- 대도시-지방 소도시 간 상생사업 포함 기금 세부운용방안 마련 건의
 -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도·지역소멸지수 등 고려 사업비 지원, 세부안 협의

3 2022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추진

교통·주택·민생안정 등 주요사업에 국비 추가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市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

□ 추진배경

- 노후전동차 교체(약 1조 8천억), 지하철노후시설개량(약 2조 3천억), 노후하수관거 교체(약 2조 9천억) 등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에 시 재정수요 급증
- 市 국비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타 시도 대비 재정 부담 가중
※ 차별보조에 따른 추가부담: 총 158개 사업, 1조 8,984억원('21년 기준)

□ 추진현황

- 중앙정부 대상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 및 기준보조율 차별 개선 건의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및 하수관로 국고보조율 개선 등 국비반영 및 법령 개정 요청
※ 국토부 예산정책협의회(4.19.), 대통령 면담(4.21.), 국무회의 건의(5.25.),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6.3.) 및 예산협의회(8.10.)
- 국회(의원) 대상 市 핵심사업 설명 및 예산반영 협조 요청
- 도시철도법 개정 및 국비반영을 위한 상임위별(국토위, 여결위, 법사위 등) 면담 등 추진

〈'21년 국비 추가확보 현황〉

● 총 14개 사업 995억원

- ▷ (市 요청 사업)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지원 등 4개 주요사업 국비 879억원 확보(전년 대비 20억 증)
- ▷ (의원발의 사업) 방화역 방음벽 설치 등 10개 사업 116억원 확보(전년 대비 443억원 감)

□ 추진계획

- 국비확보 T/F 구성·운영으로 추가확보 체계적 추진: '21. 9월 ~ 12월 초
- 정부 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 지속적 방문·설득 추진: ~ '21.12월 초까지

1단계 (공감대 형성)
'21.9월~국감완료까지
소관상임위별 서울지역구의원



2단계 (우호여론 확대)
'21.10월~11월
상임위 예산소위별 의원별 맞춤형 전략



3단계 (선택·집중)
'21.11월~12월
예결위 주요인사 방문추진

○ 총 17건: 국비 요구액(1조 3,442억원)

(단위 : 억원)

연번	소관부처 (회계)	사업명	'20년 국비확보	'21년 국비확보	'22년 국비요청	주요내용
총 17개 사업			10,967	8,382.4	13,441.9	
1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중점 (어르신·장애인 등) 손실 보전	-	-	4,500	정부지시 및 법령에 근거해 운행되는 무임승차 손실분 전액 보전
2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	저상버스 도입 국비 지원 중점	132	127	251	저상버스 도입('22년 906대) 국비지원 요청
3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원 중점	563	126	851	지하철 1~8호선 노후 시설 개선비 지원 (국비 30%)
4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국비 지원	-	506	2,084	지원비율상향(25→40%), 단가현실화 (10억→14억/칸), 국비지원기준을 납품기준으로 변경 요청
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부	도시 광역철도 건설비 및 보조율 상향조정 신규	-	-	국고보조율 상향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요청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주도로 적극 추진필요
6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상생주택 7만호 건설 신규	-	-	미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세법개정(상속세·증여세 등) 등 적극 지원요청
7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청년월세 지원 신규 중점	-	-	632	청년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에 대한 국비지원 절실
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요청 신규	5,858	4,777	지원단가 상향	매년 전년도 매입단가 반영하여 국고지원단가 상향 필요
9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하천 수변공간 개선 및 정비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신규	61	47	80	국가하천은 서울시 하천 개선방안 또는 정부차원에서 국고보조 적극 지원 필요
10	환경부 (환경개선특)	하수도사업 국비 지원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중점	-	-	368	타 시도와 같은 보조율로 노후관로 (1,107km)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필요
11	환경부 (환경개선특)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322	107	12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국비 30%)
12	환경부 (에너지및자원특)	전기차 보급 국비 지원	1,463	809	2,287	전기차(27,000대) 보급 확대
13	환경부 (에너지및자원특)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국비 지원	-	-	40.5	전기버스(806대) 보급에 따른 충전기 확대 보급 필요
14	환경부 (에너지및자원특)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국비 지원 확대	391	248	654	수소차(1,805대) 보급, 충전소부족으로 6기 구축 필요
15	환경부 (환경개선특)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	1,065	523	208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확대 및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향 등
16	환경부 (환경개선특)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150	45.4	122.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10만대) 보조금 지원 필요
17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중점	962	1,067	1,243	보육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부담 없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366개)에도 인건비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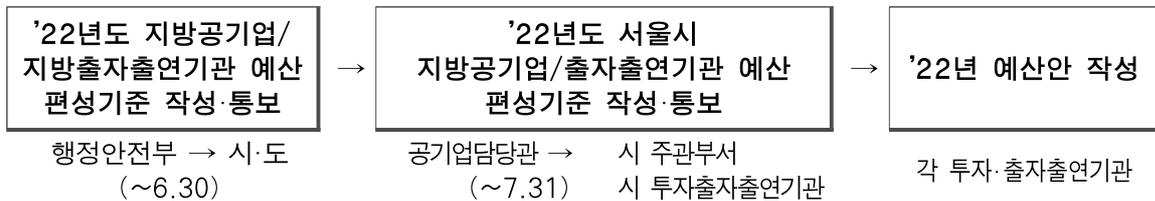
4 투자·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기준 수립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시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여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 수립근거

- (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수립절차(매년)



□ 예산 편성기준 주요내용

공통사항

- 재정건전성 강화, 독립채산 등 예산편성 공통원칙 및 주요 항목별(인건비, 예비비 등) 세부 예산편성기준 제시

2022년 주요 개선사항

- 투자기관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24) ※ 품목별 예산제도와 달리 사업내용 및 성과 파악 용이
 - 평가급 지급기준 명확화(입사·퇴사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 등
- 출자출연기관
 - 성과급 미지급 대상 구체화(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및 중징계 대상자)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항목 명확화(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등

□ 향후일정

- '22년 회계연도 출연·출자시 사전 동의(시의회) : '21. 8월
- '22년 회계연도 예산안(출연금 포함) 시의회 및 이사회 의결 : '21.12월
- '22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보고 (공사·공단, 출연기관 →市) : '22. 1월